

한문철의 현장 속으로

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해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 방법
3.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4.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

SAFETY FIRST

※ 본 학습자료의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합니다.

Chapter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해

SAFETY FIRST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city skyline at sunset. The sky is a gradient of orange, red, and purple. The city is represented by various dark silhouettes of skyscrapers and buildings. The text 'SAFETY FIRST' is written in a white, sans-serif font on the left side of the skyline.

사회적 문제 대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 사고, 화력 발전소 압사 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 가슴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 등

SAFETY FIRST



중대재해 사고 방지 필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 처벌

근로자 포함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 확보

기업의 조직 문화,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 사전 방지

SAFETY FIRST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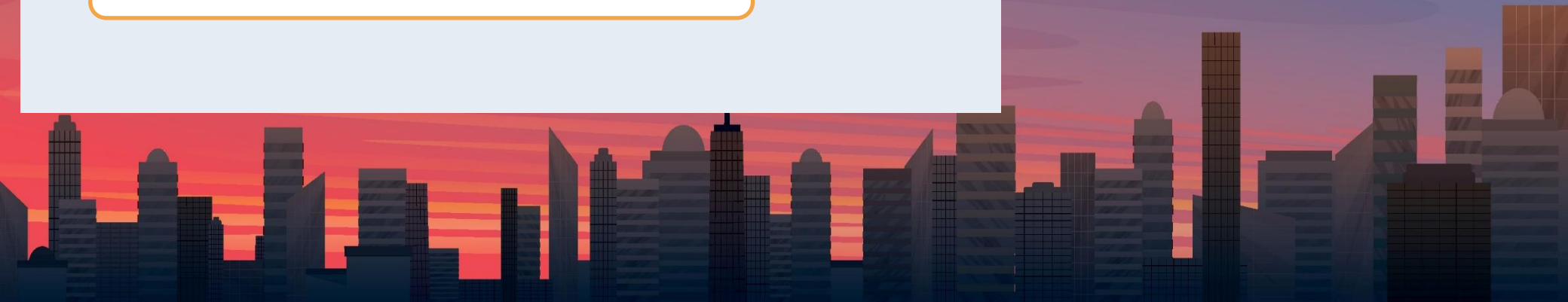
동일한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 발생 방지

실효적인 제재의 도입 필요성 등

정식 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SAFETY FIRST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 시설, 공중
교통수단 운영

인체에 해로운 연료, 제조물 취급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범인의 처벌 등 규정



중대재해 예방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SAFETY FIRST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SAFETY FIRST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SAFETY FIRST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SAFETY FIRST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 제외

SAFETY FIRST

안전·보건확보의무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부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2022. 1. 27 시행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2024. 1. 27 시행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사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조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사항

조치 사항

-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 ④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조치 필요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중대산업재해 양벌 규정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벌금형 부과



50억 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양벌 규정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교육 수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 이수 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손해 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

*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4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 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 사업주)	개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 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
재해 정의	<p>▶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사망자 1명 이상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p>*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사망·부상·질병</p>	<p>▶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사망자 1명 이상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③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4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 내용	<div><p>▶ 사업주의 안전조치</p><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 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②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③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p>▶ 사업주의 보건 조치</p><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③ 환기·청결 등 적정 기준 유지<p>→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p></div>	<div><p>▶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p><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②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p>→ ①·④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p></div>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4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처벌 수준	<div>▶ 자연인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div> <div>▶ 법인 사망 : 10억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 5천만 원 이하 벌금</div>	<div>▶ 자연인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div> <div>▶ 법인 사망 :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 10억 원 이하 벌금</div>

Chapter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 방법

SAFETY FIRST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city skyline at sunset. The sky is a gradient of orange, red, and purple. The city is composed of various skyscrapers and buildings in dark silhouettes. The text 'SAFETY FIRST' is written in a light, sans-serif font on the left side of the skyline.

기업들의 대응방안 핵심요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직접적인 책임 주체로 명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종래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 및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 부과

산업재해와 관련된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

SAFETY FIRST



기업들의 대응방안 핵심요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가?

SAFETY FIRST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관련 대응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각 기업의 내규, 조직 및 권한 등을 통해
경영책임자 명확화 필요



올바른 **조직 구성**과 각자의 **역할** 명확화

SAFETY FIRST

안전보건조치 관련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점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확립

SAFETY FIRST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관련 대응방안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부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규정



대표이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큼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실무상 수사 기관이 대표이사를 입건 및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함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관련 대응방안

경영책임자 명확화 및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확보의무 위주로 점검 필요

각 기업별 조직, 구조 하에서 경영책임자 검토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보건확보의무 위주로 점검,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및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확보, 순환점검 내역 등 확보

경영책임자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 임명 필요
(실효성 문제)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관련 대응방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련 내용을 예측하고 대응

-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나 대통령령은 현재 제정되지 않음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관련 대응방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상의 조치 확립

-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 유사한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도 규정될 가능성이 큼
-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수준 점검
- ✓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
- ✓ 안전 및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배치, 관련된 예산 및 시설 점검
- ✓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 안전보건 관련 명확한 상벌 규정 정립

사업주체 및 경영책임자 관련 대응방안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포괄하는 컴플라이언스 필요

안전보건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한 조직 구축과 관리 시스템 세팅

내부 보고 체계 정비, 제조 및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비

원재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수 절차 등 필요

재해발생 이후의 후속 조치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에 대한 일체의 자료 확보



재해 발생 이후의 대응 시나리오 등을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

Chapter 3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SAFETY FIRST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city skyline at sunset. The sky is a gradient of orange, red, and purple. The city is represented by various dark silhouettes of buildings and skyscrapers. The text 'SAFETY FIRST' is written in a white, sans-serif font on the left side of the skyline.

추진 배경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
사회적 갈등 및 국가적 손실 초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핵심 국정 과제

그동안 경제·기술 발전,
정책적 노력, 안전 의식 향상 등이
결합



20년간 사고 사망 만인율을
1/3 수준으로 감축
(‘01:1.23→’21:0.43%)

SAFETY FIRST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1 추진 배경

추진 배경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



OECD 38개국 중 34위

SAFETY FIRST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추진 배경

8년째 사고 사망 만인율이
0.4~0.5%대 수준에서 정체

중대법 시행에도 50인·억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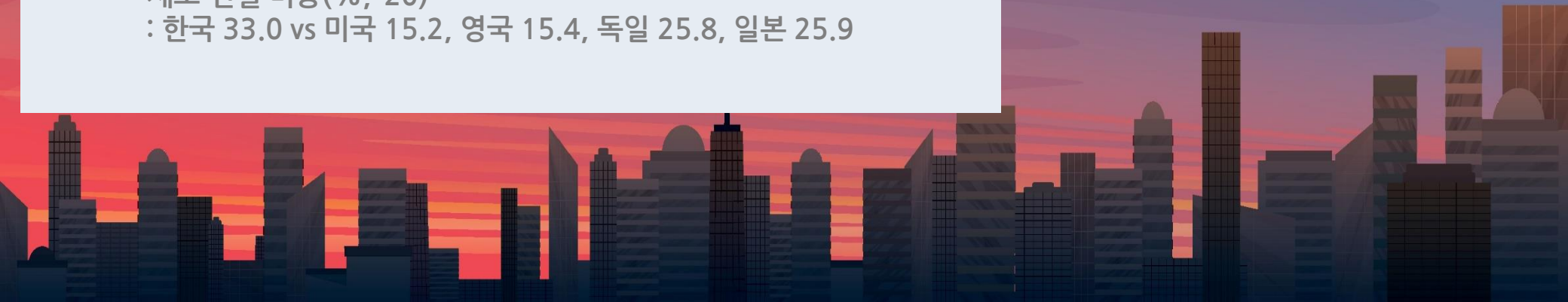
제조·건설업 비중*이 높고, 원·하청 이중구조화 및
안전 취약 계층(고령자, 외국인 등) 증가

- 안전보건 여건은 더욱 악화될 우려

* 제조·건설 비중(% , '20)

: 한국 33.0 vs 미국 15.2, 영국 15.4, 독일 25.8, 일본 25.9

SAFETY FIRST



매년 800명 이상 사고로 사망

8년째 만인율이 0.4~0.5% 수준에서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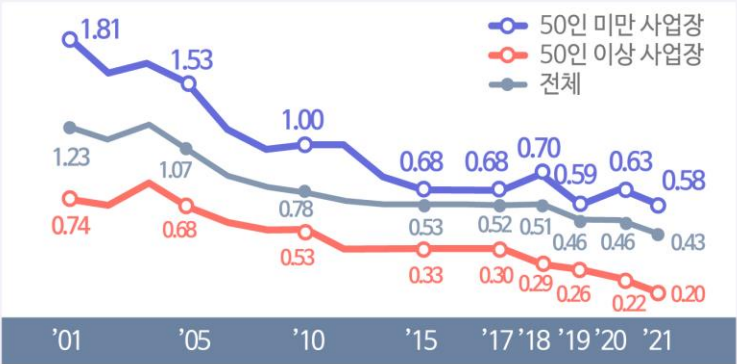


소기업, 건설·제조업에서 대부분 발생, 하청도 상당수 발생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사고사망 비중



규모별 사고사망만인율 추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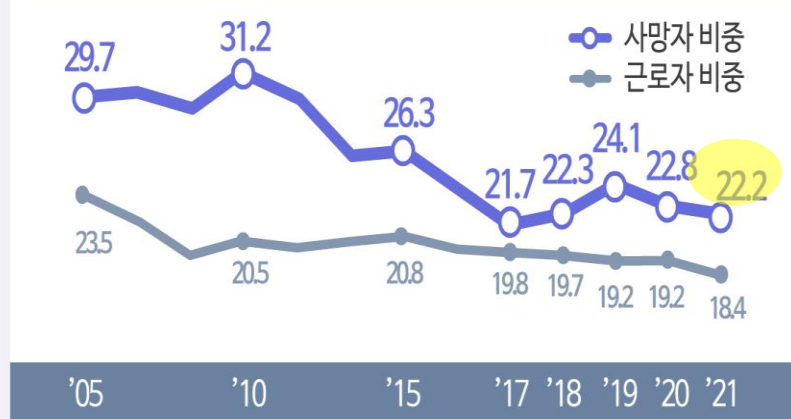


소기업, 건설·제조업에서 대부분 발생, 하청도 상당수 발생

건설업



제조업



근로자 비중 감소에도 중대재해 비중 증가 추세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2

우리나라 중대재해 현 주소 - 중대재해 현황

소기업, 건설·제조업에서 대부분 발생, 하청도 상당수 발생

하청 사망 사고*가 40% 수준 차지('1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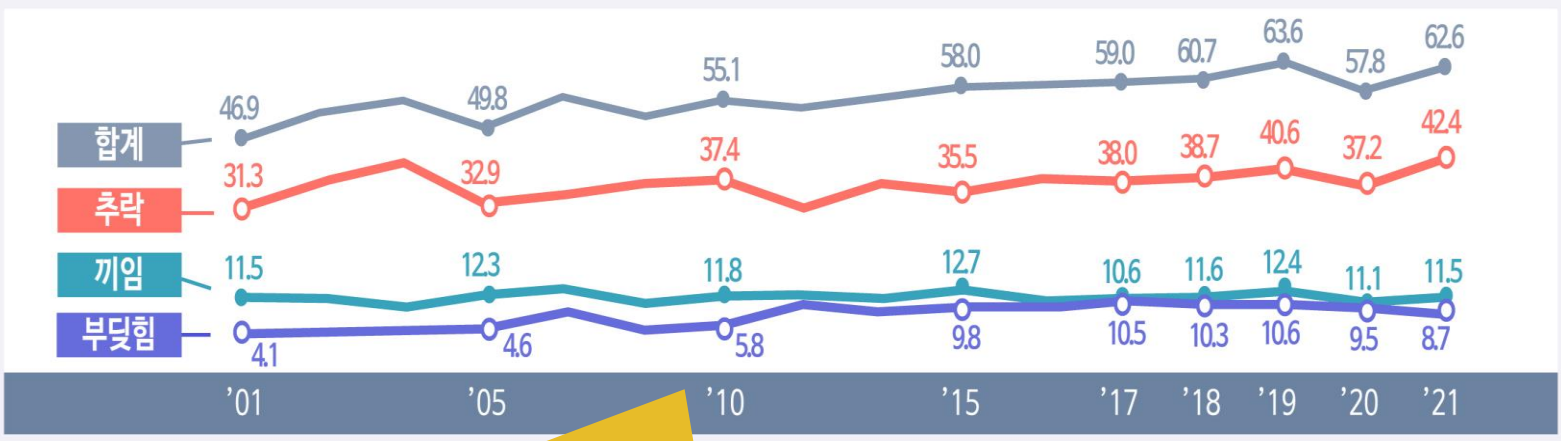
* 하도급이 관행화 된 건설(54%)·조선(73%)에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 다발

SAFETY FIRST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

추락·끼임·부딪힘 유형별 사고사망 비중



20년간 50~60% 내외로 고착화

재발 사고, 고령·외국인·특고 등 중대재해 발생 증가

재발 사고 중 첫 사망 사고 발생 후 1년 이내 재발
37.9%('01.~'21.)

- 특별 감독을 실시한 83개 기업('18.~'22.8월) 중 12개 기업에서 재발
- * (취약 계층) 고령자(55세 이상)가 58.5%, 외국인 12.3%('21.)로 지속 증가
- '21년 특고 사고 사망 36명('17년5명), 최근 5년간 급격히 증가

SAFETY FIRST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 미비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 행정

- 기업은 자체적으로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시스템과 역량 빈약

대기업

자체적으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으나 내실 있는 이행에 이르지 못함

중소기업

예방역량 자체가 부족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 미비

중대법 시행('22.1.27.) 후에도
처벌 회피에 집중하는 경향

- 중대법 적용 50인(억) 이상 기업(공사현장)의 사망 사고는 오히려 증가
(’22.10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17명)
→ 과거 발생 재해와 같거나 비슷한 사고의 재발 상황
- *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사업장의 재발 확률이 일반 사업장에 비해 6.7배 높은 수준
(’01~’20. 중대재해 통계 분석)
- 정부의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 보고서가 기업에게 공유되지 않아
반면교사(反面敎師) 자료로 미활용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 체계 미비

선진국은 70년대부터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으로
사고 사망 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

정부의 하위 규범·지침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 마련

위험성평가 등을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 발굴·제거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예방 노력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 책임 부여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

산업안전보건법령 1,220개 조항으로 방대하고 세세하게 규정

- **현장 수용성이 낮고, 자발적인 예방 역량 형성 동기 저해**
 - * 산업안전보건법 175조, 시행령 123조, 시행규칙 243조, 안전보건 기준 규칙 679조
- **매년 2~3만개소 대상의 산업안전감독도 규정 위반 위주의 적발과 처벌에만 중점**
 - * 사고 다발 요인보다는 적발하기 쉬운 서류상 점검(안전 관리자 선임, 교육 등)에 치중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및 감독, 지원 행정

민간 기술 지도는 법 위반 사항 위주로 지적,
재정 지원도 공급자 중심 구조로 기업의 위험 요인 개선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 산재 예방예산(억 원) : ('19) 3,644 → ('20) 4,198 → ('21) 9,770 → ('22)
10,921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

일부 특정인만이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있다고 인식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 생산에 부가적 요소로 치부하는 경영
문화·관행이 여전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

안전은 근로자에게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근로자의 '권리' 중심으로 강조

- 근로자가 스스로를 보호 대상으로만 여겨, 안전보건 주체로서의 현장 참여 및 실천적 행동 부족
- * 보호구 미착용, 안전 장치 제거 등 기본적 안전 수칙 미준수도 사업주 책임 귀결

원·하청 간 안전 관리 역할이 불명확하여
하청 근로자 중대재해 예방에 회색 지대 발생

안전 의식과 문화는 여전히 미성숙

‘생산’ 우선 관행과 ‘빨리빨리’ 문화가 여전히 잔존,
사회 전체의 ‘안전을 보는 눈’이 취약

안전 의식과 안전 문화 활동도
단발성의 형식적인 캠페인 위주로 진행

안전보건 교육을 법령상 사업주 의무로 규정,
획일적으로 규제·점검도 서류만 확인



안전 의식·문화 형성에 한계

Chapter 4

중대재해 감축 추진 방향

SAFETY FIRST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city skyline at sunset. The sky is a gradient of orange, red, and purple. The city is composed of various skyscrapers and buildings in dark silhouettes. The text 'SAFETY FIRST' is written in a white, sans-serif font on the left side of the skyline.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해

1

중대재해 감축 추진 기본 원칙

중대재해 감축 추진 기본 원칙

책임성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 지원

현장성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정책이
단절 없이 전달되도록 설계

혁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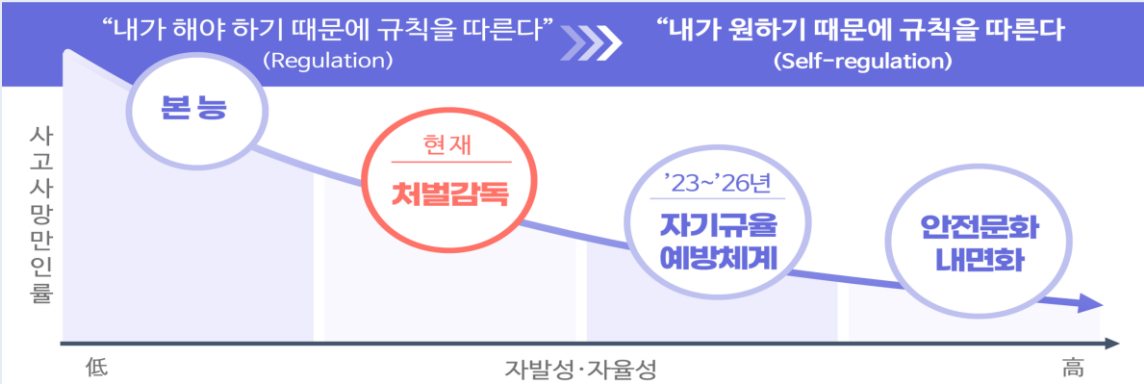
안전보건 법·제도 및 정책, 중대재해 예방 기법과
방식, 안전 의식과 문화 전반에 걸쳐 기존의
관점을 넘는 혁신적 방안 모색

SAFETY FIRST

추진 방향

유사하게 정체기를 경험한
선진국(1970년대 영국) 사례

SAFETY FIRST



전략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 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 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자기 규율 예방 체계」의 핵심 수단으로 정착
- ② 산업안전 정기 감독은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기획 감독을 통해 엄중 제재
- ③ '위험성평가' 현장 정착 지원을 위해 법령·기준 체계 정비 추진

전략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

과제1)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위험성평가

-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
- ‘13년부터 강행성 없이 도입 → 법령 및 감독 체계는 그대로 유지해 미작동
- 대기업은 일률적,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불만 → 형식적 운용

전략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

과제1)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위험성평가 의무화('23.~),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연차적 적용 확대('24.~)

- 미실시, 부적정 위험성평가에 대한 시정 명령 또는 벌칙 신설('23.~, 산안법 개정)
- 지도·점검 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개선 대책(재발 방지)의 적정성, 노·사 참여 여부, 현장 적용성 등 위주로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 자료에 적시

-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

전략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

과제2)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개편

정기 감독 : 위험성평가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

- 산업안전감독('21. 2.7만개소)은 정기 감독(1.1만개), 기획 감독(위험 요인별 1.5만개), 특별 감독(일부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 체계로 실시·운영
- 현장에서는 감독에 적발되면 일시적으로 “재수없다”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관행

전략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

과제2)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개편

정기 감독 : 위험성평가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

✓ (감독 방향) 정기 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 위험성평가 실시·이행*, 사고 사례 분석 기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시행,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이행** 여부를 필수 확인('23. 감독계획)

*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인지, 참여 여부, 사고 사례 공유 등 중점 확인

** 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 이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평상 시 안전 관리 관행 등

-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수준,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컨설팅, 재정 지원 사업으로 연계

전략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

과제2)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개편

정기 감독 : 위험성평가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



(대상 선정) 산재 통계(보상) 분석 등을 통해 재해 발생
경향성을 사전에 확인 후 감독 방향 설정

→ **고위험 기업 자동 선정*('23.~)**

* 빅 데이터(기업+위험 요인+예방 지원) 및 AI 분석 기반 사고 위험 예측 모델
개발('23.)

• 지역별 실시간 재해 현황, 산업·고용 동향 등에 따라 위험 업종을 사전에 포착하는
‘디지털 산업안전지도*’ 구축·활용

* 워크넷상의 ‘디지털 기업지도’(‘21.7월~)와 연계해 기업별 고용 현황과 산재 예방
정보를 결합 제공

전략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

과제3)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 정비

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화

- 기술 및 산업 구조 변화, 위험 기계·기구별 안전 기준의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 기준 규칙(現 679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23.)

* ▲반도체 공장 등의 비계설치 기준, 수소산업 안전 기준 등 보강·신설, ▲現 상황에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정 현행화, 중복조항 정비 ▲조문명 및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 등

전략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

과제3)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 정비

②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기준 전면 정비

- 안전보건 기준 규칙을 처벌 규정과 예방 규정으로 분류(~'24, 법령 개정)
 - ✓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핵심 규정은 처벌이 가능토록 법규성 유지
 - * (예) 처벌 규정 : “고소 작업에 대해서는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 ✓ 산재 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예방 규정으로 전환
 - 고시, 기술 가이드 형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제공
 - * (예) 예방 규정 :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 안전대 또는 추락 방지망 등 설치 기준의 세부 내용은 고시, 기술 가이드로 제공

전략1)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

과제3)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 정비

③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 해소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처벌 요건 명확화
 - ✓ 상습·반복, 다수 사망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확행
-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해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제재 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 강구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50인 미만 사망
사고 80.9%

중대재해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역량 자체가 부족



안전 관리 역량을 전폭적으로 지원

건설·제조업
72.6%

현장의 불안전 행동과 기계·설비
결함 등이 중첩된 구조화된 문제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추락·끼임·부딪힘
62.6%



- 3대 사고 유형 대상으로 특별 관리 대책 시행

하청 40%



- 원·하청 안전 관리 역할 명확화
- 원·하청 간 상생 안전 협력을 통해 하청 업체의 예방 역량 제고 지원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과제4) 중소기업 : 안전 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

① 중소기업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 신규(6개월 內)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 대상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가칭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24.~)

② 맞춤형 안전시설 및 인력 지원 확대

- ((시설 지원) 소규모 제조업(50인 미만)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가칭안전 리모델링 사업」 추진**(’24.~, 現 안전 투자혁신사업 개편)
→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으로 지원
품목·시설 확대(’23.~)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과제4) 중소기업 : 안전 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

③ 민간 기술 지도를 위험성평가 기반으로 전환

- * (現) 민간 기술 지도(50인 미만, 34.6만개소),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3.5천개소)
- 개별 안전조치 미비점 지적 위주 → **위험성평가 컨설팅**으로 전환
: 시설·공정 전반의 위험 요인 발굴 및 진단까지 기술 지도 지원
- 위험성평가 컨설팅(기술 지도)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 사업으로 연계한 경우 신속 지원* 확대
- * 지원절차 간소화 및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Quick-pass' 우선 적용

④ 소규모 기업 대상 안전보건 인증제 마련

- 현 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를 개편해 소규모 기업의 안전 수준 확인·향상을 위한 **인증 제도 신설**(’24.)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과제5) 건설·제조업 :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

① 건설업*

- * 전체의 50.4% ▲추락사고가 59.5%, ▲120억↑ 31.2%, 1~120억 48.7%, 1억↓ 20.1%
- 근로자 안전 확보 및 구조물 붕괴 등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 장비**를 건설현장에 특화 지원(국토부, '23.)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 스마트 안전 장비 사용 촉진
(現 : 스마트 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20% 내 → '23.~ : 사용한도 단계적 확대, 한도 폐지)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과제5) 건설·제조업 :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

② 제조업*

▲전체의 22.2% ▲끼임 사고가 31.5%, ▲50인↑ 26.7%, 50인↓ 73.3%

- ‘스마트 공장’ 사업에 산재 예방 협업* 모델(例 : Safe&SMART 팩토리) 신설 (중기부 협업, ‘23) → 설비·장비 제작단계부터 안전 장치 내장**(built-in) 유도

* (案) ▲(고용부)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 선정·관리 ▲(중기부) 스마트 공장 구축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 안전 장치 내장형 설비는 선진국 산재 사망 사고 감축의 주요 요인('89, OECD 고용 전망)

- AI 카메라, 자동 위험 알림 등을 통해 불안정한 작업 환경 모니터링
→ 위험 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안전 관리 시스템 확산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과제5) 건설·제조업 :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

③ 스마트 안전 장비 공급 체계 구축

- (개발) 대기업·대학(연구소)과 민·관 협력 MOU* 등을 통해 **스마트 안전 기술·장치 연구·개발 활성화**(’23.~)
- * 고용부-과기부 스마트 안전 MOU(’22.11.21.), 주요 대기업(대학) 기술협력 MOU 등 확산
- 미래전문기술원(안전 공단 內) 중심으로 **新 안전 기술 창업 지원**(벤처, 스타트업 등) 연계,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과제6) 추락·끼임·부딪힘 : 3대 사고 유형 현장 중심 특별 관리

① 3대 사고 유형 8대 요인 특별 관리

- [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 작업대, [끼임]끼임방호장치, LOTO(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8대 요인 중심으로 특별 관리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과제6) 추락·끼임·부딪힘 : 3대 사고 유형 현장 중심 특별 관리

① 3대 사고 유형 8대 요인 특별 관리

㉠ 8대 요인 핵심 안전 수칙 점검 강화

✓ 점검 시, 8대 요인 핵심 안전 수칙* 준수 및 근로자의 위험 인지·공유 여부 필수 확인

* ▲추락 예방 : 작업 발판·안전 난간·추락 방지망 설치, 개구부 덮개 설치 등

▲끼임 예방 : 덮개·울 설치, 정비·보수 작업 시 운전 정지, 잠금 조치, 표지판 설치 등

▲개인 보호구 착용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착용 등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과제6) 추락·끼임·부딪힘 : 3대 사고 유형 현장 중심 특별 관리

① 3대 사고 유형 8대 요인 특별 관리

㉠ 위험성평가 및 핵심 안전 수칙 지도·교육

- ✓ 위험성평가 결과가 반영된 작업 계획서 마련
- ✓ TBM을 통한 위험 공유 상시화(모바일 앱)
- ✓ 8대 요인 핵심 안전 수칙 교육·홍보 등 강화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과제6) 추락·끼임·부딪힘 : 3대 사고 유형 현장 중심 특별 관리

① 3대 사고 유형 8대 요인 특별 관리

㉔ 요인별 안전 관리 여건·특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

지 붕	- 농협,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 수칙 홍보·지도
사다리	-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자체 사전 작업 허가, OPS(One Point Sheet) 방식 위험성평가 실시
고소 작업대	- 2인 1조 작업 지도·권고 안전모·안전대 필수 착용 교육
방호장치	- 민간 기술 지도 시 방호장치 유무, 무단해제 여부 등 확인 의무화 - 위험 기계 보유 등 고위험기업(50인 미만)은 ‘안전일터 패키지’ 지원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과제6) 추락·끼임·부딪힘 : 3대 사고 유형 현장 중심 특별 관리

① 3대 사고 유형 8대 요인 특별 관리

㉔ 스마트 안전 장치·설비 비용 등 지원 확대

방호장치	자동 비상정지장치(인터락) 등 지원 확대
충돌방지장치	긴급제동장치, 작업자-신호수 간 무선통신장치 지원 확대
비 계	시스템 비계 등 신규 개발 및 지원 확대
지 붕	채광창 덮개 지원 확대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과제7) 원·하청 : 안전 상생 협력 강화

① 원·하청 간 안전 관리 역할 명확화

- 현행 산안법령 체계 내 원·하청 기업 간 역할·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23. 가이드라인 마련)
- * (예) ▲안전보건을 위한 원청의 하청 작업 지시 등이 불법 파견 소지가 없도록 기준 명확화
▲표준 안전 관리 도급 계약 체결(하청의 안전보건 확보 사전 명시)
▲원·하청 공동 위험성평가 실시 등
- 중층적 도급 관계에서 **중간 하수급인의 법적 책임 명확화**('24. 법 개정)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지원 강화
- 대기업(원청)의 중소기업(협력 업체) 위험성평가 역량 향상 지원 등을 위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 사업*」 확대('23.~)
- * 現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개편('22 : 5.3억 원→'23 : 99.1억 원)
- 협력 업체 지원 등 상생 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우대**(공정위, '23.~)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과제7) 원·하청 : 안전 상생 협력 강화

② 원청(대기업)의 「Safety in ESG」 경영 확산

- 산업안전 관련 사항(例 :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공시('25.~), ESG 평가 기관 활용 유도(금융위)
- * (現) 자율적 운영 → ('25.~) 일정 규모(예 :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산업안전 등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 확대 검토('24, 금융위)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과제8) 새로운 위험 요인 : 산업 구조 및 기후 변화 등 대비

①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산재 예방 역량 강화

- 최초 입직 시 건설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초안전보건 교육 도입***, 2~3년마다 보수 교육 의무화('24.~, 법 개정)
- * 특정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 **'1인 작업자'(lone-worker)**에 대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3.)
- * 배달업 종사, 유지·보수(엔지니어), 청소·경비 등에 대해 직종별 안전보건 교육, 산재 예방 정보, 스트레스 관리 등 정보 제공)

전략2)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과제8) 새로운 위험 요인 : 산업 구조 및 기후 변화 등 대비

② 고령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마련

- 직무 위험도 분석을 통해 고령자 신체·정신적 특성을 반영한 「가칭고령 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3.)

* (예) 중량물 등 안전보건 기준, 작업 속도, 근로 시간 휴게 기준 등

전략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

안전보건 주체로서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참여 확대 필요

노·사가 참여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 문화·관행 조성

➡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감축될 수 있는 여건 마련

전략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

과제9)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

①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의무 확립

- 안전보건 '주체'로 **기본 역할***과 **안전 수칙 준수 의무 명확화**(‘23.~, 법 개정)
 -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작업 시 안전행동, 안전보건 교육 등
- 안전 수칙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제재 사유·절차 등을 포함한 **「가칭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보급(‘23.)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사업장 단계적 확대(現 : 100인↑→ ‘26:10인↑)
 - 안전 분야의 취업 규칙으로 활용되도록 제도화(‘23. 법 개정)
- 취업 규칙 작성 시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포상과 제재가 가능토록 지도**(‘23.~, 표준취업 규칙에 반영)

전략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

과제9)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

②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

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現 100인↑), 건설업 노사협의체(現 120억↑)
의무설치 대상을 30인·50억 이상으로 **확대**(’23, 산안법 시행령 개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규모·위험 요인별 적정 업무·인력 수준(現 : 사업장 당 1명 원칙) 제시 및
활동 시간 보장 → **추가 위촉 유도**(’23)

* 적정 기준보다 추가 위촉 시 ‘안전일터 패키지’ 등 재정 지원 사업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

전략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

과제9)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

②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

근로자 작업 중지

작업 중지의 구체적 범위·요건 등 매뉴얼 마련, 우수기업 선정(포상 등) 시 작업 중지 활용 **실적 반영**(‘23.)

* 중앙단위, 지자체, 산업단지, 업종별 노·사·정 실천협약을 통해 활성화 추진(‘23.~)

근로자 제안

현장 근로자 안전 개선 제안(例 : ‘○○현장 안전신문고’)을 활성화

→ **채택 시 실질적 보상** 등을 통한 선순환 유도(‘23.)

* ‘안전보건협의체’에서 근로자 안전 제안 심의, 정부는 사례 경진 대회 등을 통해 지원

전략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

과제10) 범국민 안전 문화 캠페인 확산

① 중앙-지역-업종별 특화 캠페인 강화

중앙

상시적인 안전보건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 단위 '노사정 안전일터' 공동 선언

- 산업·직종별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안전보건 캠페인 의제, 실천 방식 및 전국적 확산 방안 마련

* [독일] 조합주의에 기초한 지역·업종별 자율 예방규칙 제정·준수

전략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

과제10) 범국민 안전 문화 캠페인 확산

① 중앙-지역-업종별 특화 캠페인 강화

지역

지역 內 안전보건 기관 간 ‘안전 문화실천 추진단’ 구성·운영
- 3대 사고 유형 8대 요인 핵심 안전 수칙 위주로 공동·협업 캠페인

업종별

위험 요인별, 계절·시기별로 위험경보 발령 및 특화 캠페인 전개, 안전 수칙 가이드 배포

전략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

과제10) 범국민 안전 문화 캠페인 확산

② 한국형 안전 문화 평가 지표(KSCI) 도입·확산

- 기업 안전 의식 수준, 노·사 참여도, 안전 제안 제도 운영 등을 반영한 **한국형 안전 문화 평가 지표**(Korea Safety Culture Index) 마련·보급('24.)
 - 기업 자체적으로 평가 지표별 노·사 공동 안전 문화 활동 증진

전략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

과제11) 안전보건 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① TBM 등 현장 중심 교육 확대·강화

근로자

강의 방식 외에 현장 TBM 활동, 포럼·세미나 등 참여를 **안전보건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23.~)**

- ✓ 정기 교육(年 24H), 채용시 교육(8H) 과정에 위험성평가 내용 필수적으로 반영
- ✓ 유해·위험 작업 특별 교육*(16H)은 산업·기술 변화 반영, 현장에 맞게 교육대상 재조정

* (現)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전기 작업 등 39개 작업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실시

전략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

과제11) 안전보건 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① TBM 등 현장 중심 교육 확대·강화

외국인

산업단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역별 커뮤니티 등과 연계, 국가별 안전보건 교육 과정 개설 → '찾아가는 외국인 교육' 확대('23.~)

CEO

안전경영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50인 미만 기업 CEO 대상 안전보건 교육 기회 확대·제공
('2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內 'Safety MBA' 개설 추진)

전략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

과제11) 안전보건 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② 생애 안전보건 교육 확대·강화

학령 단계

초·중·고(직업계고)-대학 등 **학령 단계별로 안전보건 교육 확대·제공**(’23.~, 교육부)

- * ▲[초중고]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직업안전교육 내용 강화
- ▲[직업계고] 산업안전보건 교과서 개발(~’24.), 교원 직무 연수교육 등 역량 강화(’23.~)
- ▲[대학] 공학 관련 학과의 교양 필수과목 지정 유도·확산(’23.~, 고용부)

구직 단계

구직자 대상 직업훈련(1.5만개) 및 재취업지원(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 시 **안전보건 교육 포함**(’23.~)

전략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

과제11) 안전보건 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③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내실화

콘텐츠

MZ세대를 위한 숏폼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메타버스 등을 통해서 콘텐츠 제공('23.~)

- 위험 기계·기구, 화학 물질 등 **현장 위험 요인별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우수기관 육성

교육 질적 수준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확산('23.~)

전략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현장 중심형으로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효과성 제고



현장 접점으로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 간 협업·거버넌스 구축 추진

전략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과제12) 생애 안전보건 교육 확대·강화

산재 예방 전문 기관의 전문성 부족 및 연계 미비

안전 공단은 감독 기관의 보조 기관화 되었다는 비판

민간 기관은 기술 지도 서비스 부실 우려

전략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과제12) 생애 안전보건 교육 확대·강화

① 민간재해 예방 기관 전문성 제고

- * 민간재해 예방 기관 : 안전·보건·건설 등 13개 분야, 1,368개 기관('22.7월)
- 양질의 종합 기술 지도·컨설팅을 제공하는 「안전보건 종합 컨설팅 기관」 육성(자체 대형화, 컨소시엄 시 각종 평가에서 우대)
- 평가 체계를 개편해 위험성평가 컨설팅 실적 및 중대재해 감축 성과 위주로 평가, 형식적 서류 점검은 축소('23.~)
→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3.~)
- * 공공 기관 안전 관리 용역 발주 시 가점 등

전략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과제13) 비상 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

①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 의료 비상 대응 체계 정비

초동 조치

- ✓ 응급 상황 초동 대처를 위해 사업장(현장) 근로자 대상 CPR(심폐소생술) 교육* 및 AED(자동제세동기) 보급 확대('23.~)
- * 사업주의 CPR 교육 시간을 의무 교육 시간으로 인정, 기초안전보건 교육 시 CPR 교육 포함
- ✓ '26년까지 사업장 내 CPR 가능자를 50% 수준으로 확대
- ✓ 응급 상황 시, 동료들이 비상 상황을 즉시 알릴 수 있는 '비상 상황 알림 시스템' 구축 지원('23.~)

전략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과제13) 비상 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

①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 의료 비상 대응 체계 정비

비상 대응

- ✓ 현장 인근 응급 의료 기관 위치·연락처 등 **현행화** 및 **게시**(안전보건책임자 업무 범위에 추가) 의무화('23.~, 법 개정)
- ✓ 사업장(현장)별 비상 상황 초기 대응(CPR), 응급 의료 기관 이송 경로 등을 **포함한「현장 비상 상황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보급('23.~)

전략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과제13) 비상 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

①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 의료 비상 대응 체계 정비

응급 처치·진료

- ✓ 골든 타임 준수를 위해 응급실·외상센터 확보
→ 중증 응급 진료 수준을 상급 종합 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반영(24. 복지부)
- ✓ 지자체, 응급 의료 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외상 체계 구축 및 산재 병원 재활 센터 지원 등을 통해 조속한 일터 복귀 지원

전략4)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과제14) 중앙-지역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

① 지역, 업종이 주도하는 특화 예방 사업 추진

지역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例 : 신도시 개발 등) 자체 예방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에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업종

업종별 협회 등에서 업종별(밀집 지자체 연계) 특화 예방 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경우 정부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例) ▲조선업 : 하청 근로자 보호 ▲화학업 : 화재·폭발 예방
▲폐기물처리업 : 끼임 사고 예방 등